

# ‘지방공휴일’ 지정권한 지자체에 준다

### 정부, 국무회의서 48개 법정공휴일 중 지정 가능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 등도 의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지정된 기념일 중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

을 제정할 수 있다.

2·28민주운동기념일, 3·15의거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48개 법정 공휴일이 대상이다.

정부는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사망’ 기준으로 낮은 보상금을 받았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해 ‘전

사’ 기준으로 보상금을 상향해 지급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CCTV)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닭 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넓히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가맹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법이 공포됨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 및 위반행위 관련 인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의결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지역구 당원 100여명은 3일 오전 이용빈 지역위원장이 운영하는 모 병원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잘못된 공천에 반성하고 독선적이고 패권적인 당 운영 방식을 즉각 개선할 것'을 공개 요구하고 있다.

## “위원장 독단” vs “불순한 음해”

### 민주당 광주 광산갑 ‘시끌시끌’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일부 당원들이 특정 지역위원장의 독선적인 운영에 반발해 규탄 거리집회를 가졌다. 해당 지역위원장 측은 이에 “명백한 공천불복 행위로, 지역위원장 선출을 염두에 둔 경쟁 후보 음해”라고 반박했다.

광주 광산갑 일부 당원들은 3일 오전 이용빈 지역위원장이 운영하는 모 병원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잘못된 공천에 반성하고 독선적이고 패권적인 당 운영 방식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5가지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우선, 이 위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임대료를 같은 건물 약

제시했다.

김승진 민주당 광산갑 부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이나 당 운영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열린 자세보다는 일방적, 패권적 무원칙이 지배했고, 원로 당원을 무시하는 행태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즉각 반박했다.

우선, 병원 임대료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01년 3월 개업한 이후 18년 동안 매월 임대료를 (위원장 측이)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이 드러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

일부 당원 “위원장 병원 임대료 대납, 공천 불공정”

위원장 측 “공천 투명, 지역위원장 선거 노린 음해”

사이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시의원 후보에게 대납토록 한 의혹과 민주당 입당 전 정외당 소속으로 시의원 비례대표로 활동한 모 후보에게 광주시당 정치아카데미와 광산갑지역위 정치학당 등에 활동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해 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지방선거 후보자 공보물에 자신을 강제로 게재토록 해 후보 당선인 아닌 지역위원장인 자신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된 점,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는 후순위로 결격사유(폭행 전과 등)가 있는 후보는 선순위로 배치한 점, 상무위원 임명 과정에서 광산에 거주하지 않는 상무위원들이 적잖은 점 등을 의혹으로

했다.

또 지방의원 불공정 공천 의혹에 대해선 “시민과 당원으로 구성된 14명의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류 접수, 심사, 면접을 거쳐 배정 순으로 후보를 정했고 지역위원장은 본인의 지역구 공천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지역위원장에 대한 불공정 공천 시비는 부당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는 지역위원장 공도 마감 직후 이뤄진 것으로 지역위원장 선거에서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 현 위원장을 아남말고식으로 음해하고 이를 빌미로 현 지역위원장을 흠집내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임형택 기자

지역공감 마케팅 전문기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평화·정의, 개혁입법연대 촉구... “원내대표 협상 한계”

### “다당제 체제 연대 필수적 과정”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3일 개혁입법연대의 신속한 구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정배 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유성엽·박주현·최경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광수 의원도 함께했다.

조배숙 대표는 “촛불 혁명 대신 과정에서 국민이 우리 사회에 기대하는 바가 컸지만, 모든 과제를 담당해야 할 국회는 구조적인 한계로 헛바퀴를 돌고 있다”며 “개혁입법연대가 국민이 우리에게 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수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몰아치고 있는데 국회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적폐들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서 속도감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체제에서는 연대가 필수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개혁입법연대로 몸쳐서 속도감 있게 입법을 해내야 하는 게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문제, 적폐청산은 완전히 성공했지만 개혁,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가 후반기로 가면 개혁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유성엽 의원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대화와 협상에 의해 국

회를 이끌어가며 실적을 내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생산적인 국회가 돼서 민생방안이나 규제개혁 법안 등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혁입법연대가 필요하다”고 목적을 높였다.

최경환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국회 과반 개혁 벨트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개혁 벨트를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견인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도 “개혁입법연대에 동의하는 평화당을 비롯해 정의당, 민주당, 다른 당에서도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당을 넘어서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개혁입법연대를 빠르게 결성하고 시민사회와 어떤 공통과제를 설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